

중국 공산당 17기 6중 전회에 관한 소고: 튼금없는 문화개혁, 신(新)통치전략으로 유용할 것인가?

이 기 현 (국제관계연구센터 부연구위원)

Online Series CO 11-27

지난 주 중국 공산당 17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 (17기 6중 전회)가 막을 내렸다. 내년 하반기에는 차기 지도부로 구성된 18대 공산당이 출범하는데다, 중국 경제의 경착륙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던 시점이어서, 17대 공산당의 마지막 정치행사로써 이번 17기 6중 전회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중국 정치엘리트의 변화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혹은 세계 경제위기에 대응한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이 제시되지 않을까하는 예상도 있었다.

기대와는 달리 튼금없이 문화개혁 이슈가 전면에 등장하였다. 문화체제의 개혁을 심화하고 사회주의 문화발전과 번영을 촉진한다는 내용이였다. 추상적인 개념들이 나열되었지만, 핵심은 중국의 종합국력에 걸 맞는 문화 소프트파워 양성과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에 대한 강조였다. 이를 위한 문화산업 육성 및 신문·출판 등 언론체계에 대한 관리와 조정 등이 주로 논의되었다. 불투명한 중국 공산당 정책결정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정치엘리트의 변화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 획득은 애초부터 난망한 일이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중국위협론이 대두되고, 국내적으로는 물가폭탄 문제에다 성장 동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까지 표출되던 급박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다소 추상적인 문화라는 개념을 핵심의제로 다룬 것은 의외라는 평가이다.

중국 공산당 회의에서 문화개혁을 주요 논제를 다룬 것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중국 공산당 12대부터 현재까지 중국 지도부는

줄곧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강조했었고, 16대 공산당대회 보고에서도 문화 건설과 문화체제 개혁을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전에는 문화 이슈가 주요의제였다기보다는 상징적이고 당위적인 프로파간다의 성격이 강했다. 이와 달리 17기 6중 전회는 문화개혁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렇다면 하필 왜 이 시점인가? 우리가 주목할 포인트는 이 화두가 차기 18대 공산당의 주요 핵심이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17대 공산당의 대표적 통치이념인 ‘조화사회’ 역시 16기 6중 전회를 기점으로 본격화된 전례가 있다.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것 중 하나는 중국이 정치 엘리트 1인에 의한 지배체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내년 18대 공산당의 새로운 정치지도자가 등장한다 하더라도—그 인물이 시진핑(习近平)이건, 리커창(李克强)이건 혹은 제3의 인물이건 간에, 중국 공산당의 집단지도체제는 지속될 것이 분명하다. 이는 누가 권자에 오르든지, 새로운 지도자가 자신만의 통치이념을 당장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18대 공산당 초기의 통치이념과 정치구호는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과 ‘문화강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왜 중국 공산당은 문화개혁을 화두로 등장시킨 것일까? 우선 쉽게 중국이 경제대국의 성과를 바탕으로 문화강국으로 도약하고자하는 의도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회의에서 논의된 대로, 중국은 종합국력에 비해 문화역량 및 문화의식 수준이 낮기 때문에, 문화개혁을 통해 중국의 소프트 파워를 키우는 동시에, 중국인들의 문화의식을 성숙시키겠다는 목적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내세운 순수한 목표보다는, 중국이 왜 문화강국의 길을 전면에 내세우는데에 대한 정치적 의도가 궁금할 수밖에 없다.

후진타오 시대 중국은 대외적으로 ‘베이징 컨센서스’의 매력을 확산시켜왔다. 미국이 주도해온 신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몰락한데 따른 반대급부로서 얻어진 것일 수도 있겠으나, 어찌되었든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G2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데 계기로 작용했던 것 역시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의 때 이른 초강대국화는 중국위협론의 잔흔을 다시 불러일으켰고, 국제사회 및 주변국들의 견제를 야기 시켰다. 또한 대내적으로도 국가통합의 위기가 심화되어온 양상이다. 소수민족들의 분리독립 요구와 테러, 급속한 경제성장의 역설들—극심한 빈부 및 도농격차, 시위와 폭동, 부패, 배금주의 만연과 도덕적 해이, 그리고 반독재 운동과 민주화의 요구 등 공산당 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사회 불안정 요소들이 확대되었다.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이러한 대내외적 갈등과 위기의 상황을 극복할 무엇인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을 수 있다. 새로운 해법으로 바로 문화개혁이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즉 중국의 소프트 파워를 대외적으로 확산하고, 사회주의 정신문명 재건설을 통해 사회통합의 위기를 수습하겠다는 의지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공산당 정권의 근간과 방향성을 정립했다는 점에 강조점을 둔다면, 향후 중국 경제의 5개년 계획을 제시한 17기 5중 전회의 경제발전 의제보다도 더욱 의미가 있다.

문제는 중국이 과연 문화강국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하는 점이다. 우선, 무엇을 가지고 문화개혁을

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다. 중국은 고유의 사회주의 가치로서 무엇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재 3개의 사상 계파가 중국의 통치이념을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마오쩌둥(毛泽东)의 중국식 사회주의 전통을 중시해야 한다는 신좌파, 시장과 자유를 강조하는 신우파, 그리고 중국 전통사상 즉 유교의 이념 등을 강조하는 전통파가 혼재되어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 갈등이 공산당 내부에서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듯하다. 근래에 이러한 가치 논란에 대한 2개의 상징적 사건이 있었다. 올 초 천안문광장 인근에 설치된 거대한 공자상이 3개월 만에 철거되었다. 또한, 국경절(10.1) 천안문광장에는 신해혁명의 대부 쑨원(孫文)의 초상화가 걸린 반면, 일부 관료들이 쑨원의 정신이 자유주의 사조의 만연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각종 기념행사를 취소시키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중국 공산당이 통치이념을 둘러싸고 좌충우돌하고 있는 상황을 잘 대변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문화가치를 활용한 통치실험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중국이 문화 강국으로 부상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사상적 갈등과 혼란에도 불구하고, 후진타오 정부가 사회통합과 안정을 위해 이용했던 문화 이념적 수단은 중화민족주의였다.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으로 중국이 향후 강대국의 길을 걸을 것이고, 개발과정에서의 경제적 고통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대중들에게 심어주는데 기여했다.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 G2로서의 국제적 지위 상승, 항공모함 건설, 유인우주선 발사, 이 모두가 위대한 중화민족이라는 이데올로기의 상징적 발현이었다.

그러나 중화민족주의의 과도한 남발은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 공세적인 대외외교의 양태로 변질되었으며, 공산당도 통제하기 힘든 극단적 민족주의 세력을 양산하는 역효과를 가져왔다. 언론과 인터넷을 등에 업은 극단적 민족주의 세력의 영향력은 오히려 공산당의 조정노력과 행동을 제약했고, 일부 관료집단들은 자신의 이해를 위해 이들 세력을 이용하기도 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던진 칼이 부메랑이 되어 공산당의 뒷목을 노리고 있는 형국이다.

무엇보다도 문화는 자생(自生)이 근본이다. 문화발전의 노정에는 자발적 조정과 권력의 분화라는 길동무가 더 잘 어울린다. 물론 문화를 육성하기 위한 인위적인 투자와 기반 조성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문화개혁에 공산당이 개입하는 것은 중국의 현실상황을 볼 때, 생명을 불어넣기 보다는 자라나는 새싹마저 밟을 가능성이 더 높다.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사회주의 정신명명 건설이라는 명분으로 방송, 공연, 출판 등 문화 전반에 걸친 규제와, 신문, 인터넷 등 언론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대한 통제방안이 이미 상당히 논의되었다고 한다. 중국 공산당이 자신의 입맛대로 사회와 문화현상을 재단하겠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근거들이다.

문화역량은 의도적으로 키운다고 해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다. 중국이 부러워하는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산업의 영향력도 단순히 막대한 자본투자의 결과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시장과 자유라는 가치의 토양에서 창조적 새싹이 돋았고, 문화역량 역시 자라나는 것이다. 단순하게 수 억

달러의 돈을 풀어, 우리의 공자를 알아달라고 외치고, 중화문화의 우수성을 강요한다고 중국의 소프트파워가 증대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답은 통제와 억제 보다는 자유와 민주에 있으며, 문화개혁이라는 길의 종착지는 결국 정치개혁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력할 때, 중국이 진정으로 문화강국으로 가는 첫 걸음을 뗄 수 있을 것이다.